

벌집 건드렸나? ... 역풍 맞은 ‘허탕 작전’ 철도파업 끝이 안보인다

민주노총 총파업 불러 국민불편·물류차질 가중

경찰이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까지 진입하는 초강수를 두고도 연행에 실패하면서 이번 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경찰은 2주일째 이어진 사상 초유의 장기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물류운송 차질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하자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를 검거해 파업을 조속히 종식하려 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이번 파업은 정부로서도 그동안 방관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도부 검거작전은 허탕만 치고 실패로 끝났다. 경찰은 22일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서 은종일 난리를 치고도 철도노조 수배자를 단 한 명도 연행하지 못했다.

정부와 경찰의 이날 대규모 ‘전격적 파업’은 철도노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민주·진보·정의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만 불러왔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혹을 때어내려 다 된 흑까지 불인’ 일종의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광주 규탄집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소속 조합원과 시민단체회원들이 2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구역 앞에서 ‘KTJ 민영화 저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내세워 이번 파업을 강행했으나 그동안 내·외부의 여러 약조건과 싸워왔다. 파업 초기부터 시작된 정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강경 대응과 징계 등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피로를 느끼는 일부 노조원들의 복귀, 열차 운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 대한 승객 불만, 물류운송 차질, 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와의 연대파업이 무산된 것도 노조 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파라서 파업 동력이 점차 소진된 상황에서 정부와 경찰의 이번 초강수 점거작전은 ‘꺼져가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는 23일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국회 특위, 사회운동 등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 대한 승객 불만, 물류운송 차질, 서울지하철노조·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와의 연대파업이 무산된 것도 노조 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22일까지 복귀인원은 1098명(12.5%)에 달했으나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복귀자는 21명에 그쳤다. 현재까지의 복귀 인원은 1119명(12.8%)이다. 지도부가 간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철도 노조원들의 응집력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이번 주말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이뤄지면 철도 파업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연필뉴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자체·의회 성명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막혀 2007년 무산됐던 SK이노비스 이전공장 생산라인 증설이 6년여 만에 허가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서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 91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인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등은 2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이자 새 정부가 제시한 4대 국정기조 중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통합과제”라며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르는 것은 헌법 가치 훼손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성장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은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고 지방 입지 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을 유발해 지방경제 파탄은 물론 지방이 지닌 다양한 잠재자원을 사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규제완화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SK이노비스 이전공장 증설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하이닉스 이전공장 증설 예정지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지역이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라며 “사실상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1조8000억원 규모의 하이닉스 이전공장 증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 공동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與 “민영화 금지 결의” 野 “민영화 금지 입법” ... 평행선

안철수 의원도 정부 비판

여야는 23일에도 보름째 이어지는 철도노조 파업과 전날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또 여야는 해법을 놓고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여 철도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중단하면 국

회 차원의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안전위험,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루빨리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정부의 고육이책이었을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하면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조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홍 의원은 “지금 정부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철도사업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는 중북부 이나 공안탄압에 의지해서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이날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시각차가 컸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은 아예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며 국내 및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여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김강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대국민 간담회를 열라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돼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여야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전날 공권력 투입에 대해 “뜻이 다른 국민,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는 모두의 정부여야 한다”며 “요즘 정부와 여당은 소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돼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진표기자 jpark@kwangju.co.kr

차대통령 “원칙 고수” 확인

설 명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 등 헌안과 관련,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여야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전날 공권력 투입에 대해 ‘뜻이 다른 국민,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부는 모두의 정부여야 한다’”며 “요즘 정부와 여당은 소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돼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는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勞政) 대결’ 양상을 띠기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 등의 대처에 있어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사 대상은 박 대통령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 국한한 만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공직자·결재인 등 사회 지도층과 부정부패 행위자, 성범죄자, 강력범, 다역 경제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jpark@kwangju.co.kr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낭만이 있는 겨울여행,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다양한 즐거움! 싱가포르 여행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보라여행사 (순천 엔씨백화점 2층)	061)724-1688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 / 토요일(3박5일)

[하파케주입] 앙코르왓 4일/5일 599,000원 ~	[하파케주입] 앙코르왓 4일/5일 799,000원 ~
[하파케클래시] 앙코르왓 4일/5일 999,000원 ~	[하파케클래시] 앙코르왓 4일/5일 1,149,000원 ~

하나골프

부영CC / 포키폰CC / 앙코르 54홀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399,000원 ~	[초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749,000원 ~
-----------------------------------	------------------------------------

무안출발 상품

[CCPF01-MUX] 상해/항주/소주 4일 579,000원 ~	[AAPP50-MU] [상해경유]방콕/파타야 5일 999,000원 ~
----------------------------------------	-------------------------------------------

인선출발

[ASPI09-SOK] 싱가포르 패키지 4일 1,399,000원 ~	[ASPI09-S06] 싱가포르 패키지 4일 899,000원 ~
[ASA103-SG1] 싱가포르 자유여행 4일 999,000원 ~	[ASA102-S04] 싱가포르 자유여행 4일 799,000원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영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그램,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주)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로) ■관광통신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